



제7차 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일시 2017. 2. 23 (목) 10:30~12:30
장소 광주광역시 아이플렉스광주 스타트업빌
주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

제7차 청년정책포럼

10:00-10:25	▶ 등 록
10:25-10:30	▶ 사회자 오프닝 사회 김기현 자립·역량연구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0-10:35	▶ 개회사 박용호 위원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10:35-10:40	▶ 환영사 윤장현 시장 (광주광역시)
10:40-10:45	▶ 축 사 노 혁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세션〉 발 표	
10:45~11:05 (발표 20분)	발 표 1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발표 조진우 초빙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05~11:20 (발표 15분)	발 표 2 ▶ 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 발표 구종천 과장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2세션〉 토 론	
11:20-12:20 (토론 60분)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토론 • 좌 장 김기현 자립·역량연구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패 널 조승수 청년위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동운 청년위원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신현식 단원 (2030정책참여단) 성재민 동향분석실장 (한국노동연구원) 김세나 부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12:20-12:30	▶ 정리 및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발 표 1
.....

제7차 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조 진 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조진우 (초빙연구위원)

2017.2.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들어가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들어가며

이행기 청년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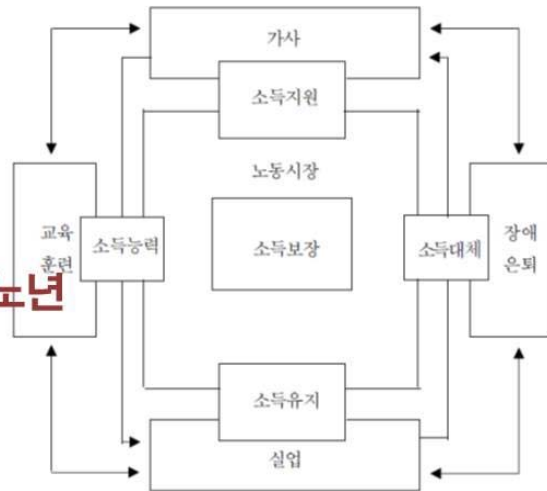
청년정책:

대상특화정책이냐?

- 청소년-청년-장년-노년

기능별 정책이냐?

- 교육-노동-복지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그림1-1) 인용

청년기 이행지체



80년대까지



90년대 이후



노동시장



면허, 정원관리,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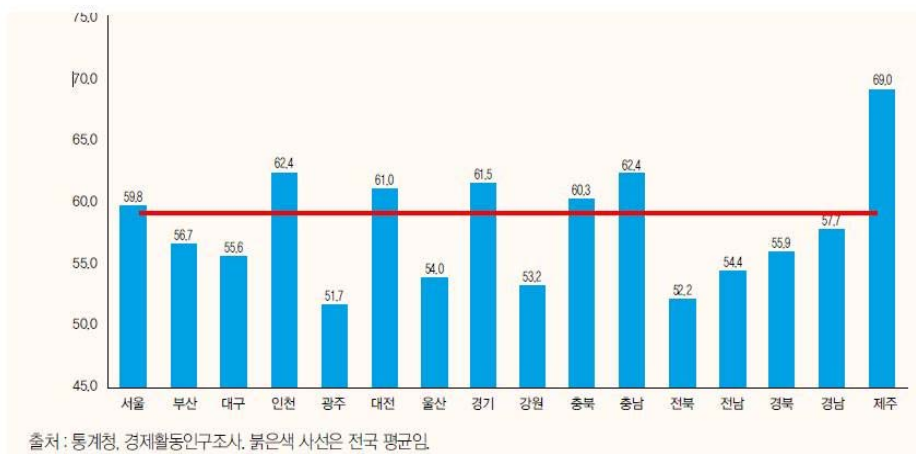
02. 지역문제로서의 청년이슈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 지역문제로서의 청년이슈

지역별 고용지표

<16개 시도별 청년(20-29세) 고용률(2016 3분기)>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6

지역별 청년유동행태

<16개 시도별 청년(20-29세) 인구 순유입 비교(2006-2015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2006-2015), 주민등록인구현황(2006)

03. 지역별 청년정책제도

03. 지역별 청년정책 제도

2016년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제정 일시	청년범위
서울	청년기본조례	2015.1.2.	청년고용특별법 적용
부산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5.22.	나이규정 없음
대구	청년기본조례	2015.12.30.	19~39세
광주	청년정책기본조례	2015.12.28.	19~39세
대전	청년기본조례	2016.10.20.	19~39세
경기	청년정책기본조례	2015.8.13.	청년고용특별법 적용
충북	청년기본조례	2016.5.24.	15~39세
충남	청년기본조례	2016.2.22.	18~34세
전남	청년발전기본조례	2015.7.23.	18~39세
경남	청년발전기본조례	2016.6.9.	19~34세
제주	청년기본조례	2016.6.22.	19~34세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지역별 청년정책 수행조직

출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 2017. 2.7. 현재

	실/국/본부	과/관/단	팀
서울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 청년공간지원팀(총15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4명)
부산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지원팀(4명)
대구	시민행복교육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청년소통, 청년사업팀(총11명)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인재육성과	청년정책, 청년지원담당(총11명)
대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대학청년담당(4명)
경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3명)
강원	경제진흥국	일자리추진단	청년일자리팀(3명)
충북	행정국	청년지원과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복지팀(총11명)
충남	기획관리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3명)
전북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정책관	청년정책팀(5명)
전남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지원관	청년일자리팀(2명)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4명)
경북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취업과	청년취업정책, 청년취업협력, 청년창업지원담당(총12명)
경남	경제통상국	고용정책단	청년일자리담당(4명)
제주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청년정책팀(3명)

참고: 청년정책과 대학지원 업무가 별도 팀일 경우 청년으로 보지 않았음.(예: 전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지역별 청년정책제도 분석

청년정책을 기획기능으로 본 사례

- 서울 : 혁신기획관-청년정책담당관
- 대전 : 정책기획관-정책기획관
- 충남 : 기획관리실-지속가능정책담당관
- 전남 : 기획조정실-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을 사회분야 집행기능으로 본 사례

- 대구 : 시민행복교육국-청년정책과
- 광주 : 자치행정국-청년인재육성과
- 경기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
- 충북 : 행정국-청년지원과
- 제주 : 특별자치행정국-평생교육과

청년정책을 경제분야 집행기능으로 본 사례

- 부산 :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창출과
- 강원 : 경제진흥국-일자리추진단
- 전북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정책관
- 경북 : 일자리민생본부-청년취업과
- 경남 : 경제통상국-고용정책단
- 서울, 전남

2016년 지역별 청년지원예산

청년고용 지원사업 예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3.522.제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청년관련 사업 추진
- 청년기본조례 제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 고유의 청년고용사업 추진

청년정책사업 예산

- 2015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서울, 대구, 광주는 청년특화사업예산 집행
- 서울제외 지역은 조례 상 계획 수립 등 연구분야 예산에 중점
- 연구예산외 사업비는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행사비(서울제외)

청년정책기본계획

- 서울 : 서울청년 희망프로젝트-2020
- 부산 :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 계획
- 광주 : '청년도시 -광주'
- 대구 : '2020 청년희망 대구'

04. 청년문제에 대한 진단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 청년문제에 대한 진단

- 학력과잉 : 최근 10년간 청년층 30%가 과잉학력
- 이행지체 : 교육 후 취업까지의 기간이 지체되면서 청년 NEET발생
- 지역인재 유출 : 지방대 출신자의 수도권 이전 현상
-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 부족 : 지역 중소기업일수록 근무조건 열악
- 정책실패 : 정책의 일관성 부족, 부처간 대상 중복
- 임금격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부재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4

05.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처방

NZ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라

- 기관간 중복 해소 : 중앙정부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정책경쟁 보다는 최종 소비자의 효용우선
- 선택과 집중 : 효과없는 과제와 정책을 폐기하는 용기와 기득집단 설득 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 진로교육 강화를 통한 학력과잉 해소
-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 학습능력에 따른 배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 모두 정규직화 보다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해소가 바람직 - 건강한 경쟁

다양한 정책을 융합하라

- 생애주기 정책 : 종합적 관점에서 생애주기 전체를 파악하고 각 부처의 정책 조율 필요
- 청년 대상 여러 부처 정책 융합
- 지역 거버넌스 활용

NZ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06. 지자체 청년정책 제안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정립

- 정책의 개방성 확보 : 청년정책은 여러 분야 정책이 융합하는 플랫폼이어야 함
-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할 :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

지역청년정책 제안

- 지자체 중심 진로교육 체험처 연계 : 지자체 네트워크 활용
- 지역 기업 공채 실시 : 지역 중소기업 정보 제공과 지역 인재 활용
- 지역중심 선배넷(가칭) 구축 : 지역 청년 간 건전하고 자발적인 연계 지원
- 청년 맞벌이 가족 지원 : 근로기준법 준수 독려
- 전국청년포럼 개최 : 지역 특성을 살린 지자체의 자발적 활동 독려 및 정보교환

정책제안의 결론

- 기득권 해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8

THANK YOU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 표 2
.....

제7차 청년정책포럼



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



구 종 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장

- 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 -

GJ Youth
2017

2017 광주청년정책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I 민선 6기 이전과 이후

- ◇ (경제) '97년 IMF, '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에서 양극화로 청년문제 심화
- ◇ (사회)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주도한 청년주체 약화
- ◇ (민선6기 이전) 지역발전의 주된 동력인 청년에 대한 인식 부재, 정책지원 부족
- ◇ (민선6기 이후) 청년을 2030년 광주 핵심리더로 인식, 경제·사회 주체로 양성

1 지난 2년의 성과

민선 6기 이전의 청년정책

- 2014년 이전에는 보편적인 정책영역과 대상으로 청년 미포함
-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도 부재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14.1.1. 시행)에 따른 조례 미제정
 - ※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조례」 : 2015. 7. 1. 제정
- 중앙정부 협력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중심으로 시행(5개 사업)
 - 중앙정부 협력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 빛고을 장학금 지원, 남도학숙 운영

민선 6기의 청년정책

- 일자리를 기본으로 청년의 삶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 조성
 - 청년업무 전담부서 '청년인재육성과' 신설 : 2014. 9. 1.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정 : 2015. 12. 28.
 -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실시 : 2015. 6월 ~ 12월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6. 1월 ~ 8월

○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주체 형성

- 2030년 광주의 미래먹거리 기반구축 : 광주형일자리, 3대산업밸리 추진 등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업생태계 조성 : 아이플렉스 개관, 청년창업특례보증 등
- 일자리진입을 위한 다양한 일경험 제공 : 체육인재마을활동가 양성, 일자리발굴사업 등

○ 광주를 이끌어갈 사회주체 양성

- 공간중심 활동기반 확대 : 광주청년센터 운영, 광주청년예술인센터 개관 등
- 광주의 활력창출 주요 인적자원 성장 : 세계청년축제 개최, 청년의거리 운영 등
- 지역공동체 참여 방안 확대 : 청년참여 할당제 도입, 광주청년위원회 운영 등

< 광주청년과 함께한 지난 2년 >

◆ 아픔, 좌절, 포기를 버렸습니다.

- “우리는 좌절세대로 불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정가온, 세계청년축제 기획단)

◆ 정의, 민주주의, 광주다움을 지켰습니다.

- “나의 참여를 통해 정의로운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황인선, 광주청년위원)

◆ 변화, 혁신, 활력으로 바꿨습니다.

-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응원해주는 광주가 좋아요.”
(김진아, 1913송정역시장 청년상인)



2 광주의 청년 실태

광주에서 살고싶은 청년들

- 서울·수도권의 고용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청년층의 유출률이 감소하고 유입률이 증가하는 추세

- 유출률: 53%→41.6% , 유입률: 17.9%→24.4%, 잔류율: 47%→58.4%

<시·도별 대학 졸업자 잔류·유입·유출의 지역별 차이>

(단위: %)

	잔류율		유입률		유출률		흡수율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서울	71.5	64.5	116.5	91.6	28.5	35.5	62.0	58.7
부산	58.7	56.3	14.9	15.4	41.3	43.7	20.2	21.5
대구	59.2	53.1	42.7	34.1	40.8	46.9	41.9	39.1
대전	48.4	43.4	24.8	29.6	51.6	56.6	33.8	40.5
인천	41.4	33.3	89.5	136.5	58.6	66.7	68.4	80.4
광주	47.0	58.4	17.9	24.4	53.0	41.6	27.6	29.5
울산	66.5	65.9	94.9	143.8	33.5	34.1	58.8	68.6
경기	39.8	46.5	48.9	63.0	60.2	53.5	55.1	57.5
강원	42.3	29.2	18.6	26.1	57.7	70.8	30.5	47.2
충북	38.7	39.4	24.8	31.1	61.3	60.6	39.1	44.1
충남	24.3	19.9	35.6	30.8	75.7	80.1	59.4	60.8
전북	53.6	52.9	13.0	11.3	46.4	47.1	19.6	17.6
전남	53.0	50.8	37.8	28.9	47.0	49.2	41.7	36.3
경북	35.1	32.8	19.0	26.4	64.9	67.2	35.1	44.6
경남	67.6	71.5	59.9	81.6	32.4	28.5	47.0	53.3
제주	73.3	80.8	14.9	18.4	26.7	19.2	16.9	18.5
세종	-	6.1	-	26.2	-	93.9	-	81.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3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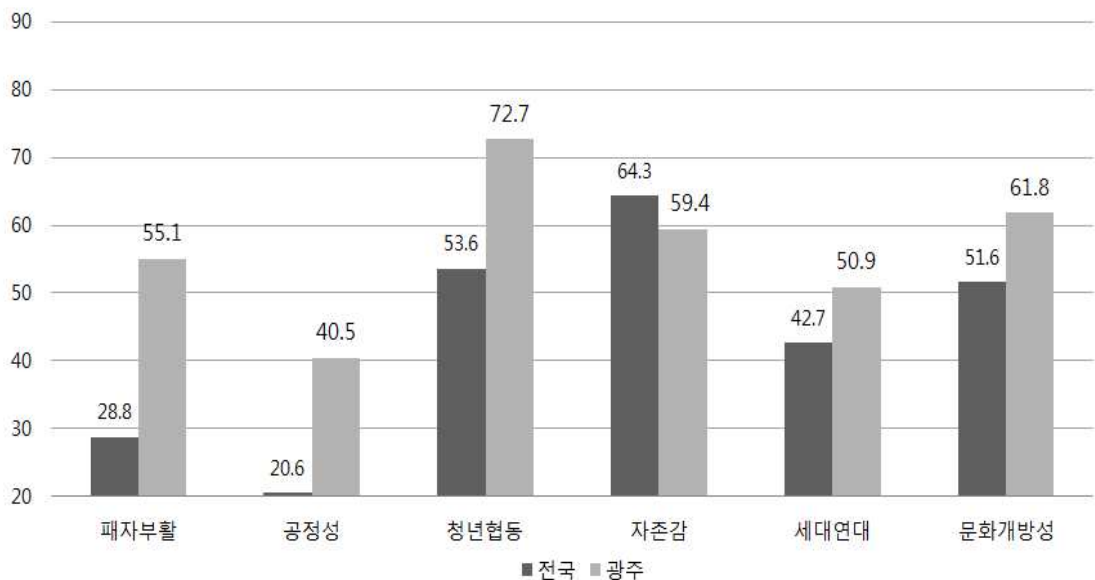
정책방향

- 고용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 지역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도 고려
- 청년층 진로경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주거 등 자립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필요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삶 속에서 **광주지역 청년들의 사회 인식은 높은 긍정지수** 표출
- 자존감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호남인으로서 경험적 피해의식이 잠재된 것으로 해석

<전국-광주 사회인식 비교지수>

(단위: 점)



BASE: 광주_전체응답자, 단위: 점, 점수가 높을수록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
출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 이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2015.

자료: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2015)

정책방향

-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 공동체 기반의 경제시스템 활성화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기반 확대
 - 청년 시정참여 할당의 적극적인 운영
- 청년층의 자존감 상승을 위한 사회캠페인 시행

□ **당당하게 일하고 싶은 청년들**

○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지역청년층의 강한 요구

- 청년고용정책 방향 : 고용안정·격차해소 47.7%(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2015)

○ 현재 고용의 질과 안정성은 열악하고 청년층 임금양극화 뚜렷

- 서비스업 취업자 74.5%, 10인미만 영세업체 94.3%(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15)
- 고용형태별(최대 70만원), 성별(최대 50만원)에 따라 평균임금에 큰 차이

<고용형태별 남·여 평균 임금>

(단위: 원)

성 별	고용 형태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남	개인사업(특수고용 포함)	324.107	56	206.3693
	비정규직(계약직/간접고용)	173.683	63	56.6975
	정규직	246.421	140	103.5814
	합계	245.525	259	135.0293
여	개인사업(특수고용 포함)	234.074	54	133.6077
	비정규직(계약직/간접고용)	159.386	83	68.8083
	정규직	189.122	148	63.0692
	합계	188.979	285	86.0226

자료: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2015)

정책방향

■ 청년고용정책의 방향을 보다 세분화하는 계획이 필요

- 일자리 기반을 위한 정책 : 3대산업밸리, 광주형일자리 등
- 일자리 진입을 위한 정책 : 인력양성 사업, 일경험 제공 등
-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 저임금 근로, 불안정 반복 근로 등의 상쇄 정책

정책 밖에 놓인 청년들

-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졸업을 미루는 학생수 증가** 추세
 - 광주지역 한해 졸업예정자 2만명, 졸업유예생 5명중 1명꼴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광주지역 청년들의 평균 취업준비기간 25.7개월**로 전국 대비 2배 이상 높아서 청년 및 부모세대 생활비 부담 가중
 - ※ 취업 준비기간 전국 평균 : 11개월(201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 준비기간>

(단위 : 명, 개월)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전체		394	25.7	20	109	1
성별	남성	182	25.1	19	109	2
	여성	212	26.2	21	109	1
연령	19~24세	268	24.9	19	109	1
	25~29세	73	27.9	20	85	1
	30~34세	39	28.0	24	97	3
	35~39세	13	22.6	17	61	2

자료: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2015)

- 광주 소재 대학생 **5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 경제활동 이행기에 빚을 안고 있어 자립기반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
 - 대출 평균금액 1,240만원, 상환할 금액 1,111만원(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비율)

<지역별 소재 대학졸업생의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만원)

	학자금대출 경험 있음	학자금 대출 총 금액			앞으로 상환해야 할 대출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	평균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	평균 금액
전국	29.8	10	12,000	1,243	1	7,000	1,048
서울	32.5	60	12,000	1,401	15	7,000	1,163
부산	24.7	100	4,000	1,054	20	4,000	871
대구	25.2	60	4,000	987	30	4,000	891
대전	27.4	50	3,500	1,099	50	3,500	986
인천	35.5	130	4,000	1,195	20	3,600	969
광주	20.9	100	3,800	1,240	50	3,800	1,111
울산	12.9	60	4,000	1,146	170	1,900	897

	학자금대출 경험 있음	학자금 대출 총 금액			앞으로 상환해야 할 대출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	평균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	평균 금액
경기	38.5	10	5,000	1,212	1	4,500	989
강원	28.6	100	7,000	1,354	100	5,000	1,138
충북	29.8	60	5,000	1,192	100	4,000	950
충남	33.4	60	5,000	1,495	40	4,400	1,314
전북	26.3	45	4,200	1,174	20	3,700	1,057
전남	16.8	180	3,600	1,001	50	2,700	844
경북	26.5	100	6,000	1,362	1	6,000	1,153
경남	22.6	70	3,400	1,066	50	3,500	928
제주	25.9	110	2,500	673	33	2,000	674
세종	27.3	100	3,800	1,153	100	3,800	1,06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3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시자료.

정책방향

- 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책 필요
- 현재의 중앙정부 구직활동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개발
 - 중앙정부 구직활동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상담, 훈련, 면접)
- 민간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연계형 생활안정 지원 방안 마련

- ◇ (국제흐름) UN 청년정책의 기조선언 : 지원(support) → 투자(investment)
- ◇ (광주다움) 민주인권 도시의 전통을 청년정책으로 연계 : 시민권(civil rights)의 확장
- ◇ (개념) 국가·사회로부터 마땅히 제공받아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 ◇ (방향) 경제·사회 주체로서 일할 권리, 자립할 권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1 청년정책 패러다임 변화

□ 청년정책의 국제 추세

- 국제연합(UN) 글로벌유스포럼에서 선언(2014, 아제르바이젠 바쿠)
 - 바쿠선언 : “청년정책은 지원이 아닌 투자다”
 -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
- 유럽연합(EU) 권리 중심의 정책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사업 제시(2015)
 - 핵심사업 2가지 : 에라스무스 플러스, 청년보장(Youth Guarantee)
 - 청년보장은 EU의 회원국들이 모든 청년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선언에서 출발
- 일본 ‘희망격차사회’ 논쟁 이후, 청년정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타겟팅
 - 아동·청년 비전선언 발표 : 0세부터 30세까지의 사회이행기로 청년범위 규정
 - 청년고용촉진법률 제정(2015) : 신규졸업자, 프리터, 니트로 지원대상 명시

□ 한국 청년정책의 한계

- 정책대상 범위가 법률·지원사업별로 달라서 효율적 추진에 한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만15세~29세, 공공기관 의무고용 대상 : 만15세~34세
 - 고용노동부 구직수당 지급 : 만18세~34세,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 만19세~29세
 - 창업자금 지원 청년연령 : 만39세 이하, 청년기본법 : 만19세~39세

○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주요사업(67개)

-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운영기관 등을 통한 간접지원 형태에 집중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수(18개)

※ 해외 사례 : 기업지원은 세제감면(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 청년정책, 고용정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필요성 제기

- 교육훈련 등의 간접지원을 직접지원으로 전환
- 대학, 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이 청년층 구직에 필요한 교육과 큰 차이
- 청년정책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하여 명확한 정책효과 도출

전반기 성과기반 청년정책 방향정립

○ 추진과정 : 다양한 의견수렴, 협치,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정책방향 수립

-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 광주청년포럼, 청년도시컨퍼런스 등

○ 지역성 : 광주 역사 기반의 광주다운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요구

○ 정책방향 : 경제·사회적 주체로서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

- 권리보장을 기조로 한 국제흐름에 부응, 민주·인권도시를 청년으로 확장

○ 추진방법 :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 단기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

- 중·장기 : 미래먹거리 창출 등 청년시민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 단 기 : 긴급투자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타겟화된 정책대상 단계적 지원

※ 국제노동기구 기준 청년정책 우선지원 대상 : 불안정노동, 장기미취업, 니트

○ 운영방법 : 신규 정책·사업과 기존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보완적 연계

○ 기대효과 : 청년정책이 전 세대·지역의 미래정책으로 자리매김

- 청년의 자립을 통해 부모세대의 부담을 감소, 세대통합적 정책효과
- 청년의 활력과 혁신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미래정책

2 2017년 정책비전과 방향

비전

넉넉하고 당당한 청년의 삶 보장

목표



핵심사업

넉넉한 경제청년	따뜻한 복지청년	꿈꾸는 문화청년	참여하는 자치청년
- 광주청년드림사업 (25억) - 광주청년 창업 펀드 결성 운영 (100억) - 창업청년 특례보증 (20억)	- 구직청년 교통카드 (3억) - 대학(원)생 학자금 이차지원 (1억) - 청년건강권 보장 (1.5억)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쿼터제 (1억) - 세계청년축제 (3억)	-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치강화(비예산) - 청년운영공간 교류활동지원 (1억)
★ 전 체 4개 분야 63개 사업 563억 (신규 17개 52억, 계속 46개 511억)			

추진방향

- 미래세대 당사자이자 참여주체인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를 해결
 - ⇒ 사업 구상에서 실행까지 참여하는 청년의 비중과 다양성 확대
-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공감행정 실현
 - ⇒ 청년일자리, 창업, 복지 등 청년들에게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중점 추진

3 2017년 핵심사업(10개)

1 광주청년드림(Dream)사업 * 광주형 청년구직활동 지원

※ 청년도시광주 TF를 구성하여 추진방향 2차례 논의

추진 배경

- 장기 미취업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구직 지원책 필요
-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구직을 촉진하는 광주형 구직활동수당 도입
- ※ 보건복지부 부동의 사례인 청년수당(서울시), 청년배당(성남시)를 보완하여 지원

주요 내용

- 참여대상 : 광주거주 미취업 청년(만19세~34세)
- 추진유형 : 6개유형
 - 공공기관형(도시철도공사, 그린카진흥원 등),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기업형, 청년활동가형, 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 추진방법 : 각 유형별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
- 추진방향 : 근로에 참여한 청년에 대해 임금과 구직활동수당 지원
 - 유형별 사업장 근로기회 제공(생활임금 적용 *1시간당 8,410원)
 - 구직활동 비용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 소요예산 : 25억원

2 광주청년창업펀드 결성 운영

추진 방향

- 지역 청년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연계로 창업성공을 제고

주요 내용

- 운영기간 : 투자조합결성일로부터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지원대상 : 지역내 초기창업(5년이내, 만 39세 이하)
 - 개인·중소·벤처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하, R&D비율 5%이상 창업기업
- 투자한도 : 제한없음 (최소 1억원 이상)
 - 사업화 단계의 장비구축, 부지매입, 공장설립 등 대규모 시설, 운전자금 투자
- 총사업비 : 100억원

3 청년 창업 특례보증

추진 방향

-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창업 시 보증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육성

주요 내용

- 시행시기 : 2017. 상반기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규모 / 보증규모 : 20억원(시비) / 200억원(10배수)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청년창업가(39세 이하, 업력 5년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규모·조건 : 5천만원 이내, 5년 이내 상환
 - 일시상환대출 : 1년(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대출 : 5년(1년 거치기간 포함)
- 신청접수 : 광주신용보증재단

4 구직청년 교통카드 발급

추진 방향

-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개발
- 민간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연계형 생활안정지원방안 마련

주요 내용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 유도
 - 기간/대상 : 6개월분, 만19세~29세 구직활동 청년 500여명
 - 지원내용 : 1일 2회 교통비지급(시내버스 요금기준)
 - 지원조건 : 교육·취업상담·구직활동 등 참여 이수자에 한하여 지원
- 사업비 : 3억원(시비)

5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지원(확대)

추진 방향

- 「광주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후 대학원생까지 확대
 -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상환유예청년 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향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중인 청년들을 위한 대출이자지급(향후)

주요 내용

- 광주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며, 1년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100백만원 범위 내 학생부담분 대출금리 2.5% 지원
- 사 업 비 : 1억원(시비)

6 청년 건강권 보장

추진 방향

- 청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및 상담공간으로서 마인드링크 운영
- 청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

- 추진방법 :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마인드링크) 운영
- 주요내용 : 마인드링크(청년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 자살예방 상담, 캠페인 등
- 사 업 비 : 1.5억원(국비 0.75, 시비 0.75)

[7]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쿼터제

추진 방향

- 신진 및 청년 예술가들에게 기획 및 창작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예술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제공

주요 내용

-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개인 및 단체지원 확대
-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여 신진→저명→원로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다리 시스템 구축
- 추진방법 : 광주문화재단 주관, 지원대상사업 공모 및 심사
 - ✳ 지원 공모사업 선정자 중 청년수 목표비율 20%
- 사 업 비 : 1억원(국비 0.5, 시비 0.5)

[8] 세계청년축제

추진 방향

- 지역청년들의 문화적인 끼와 열정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에 청년의 활력을 불어 넣는 역동적인 축제로 추진

주요 내용

- 기간/장소 : '17. 7월중 /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 주요구성 : 문화전당 일원 공간을 5개영역으로 구분해 프로그램 구성
 - 청년축제학교, 청년상인 페스티벌, 도심캠핑, 별밤영화제, 청년을 바꾸는 지혜 등
- 추진방향 : 기획파트와 실행파트를 나누어서 균형있게 추진
 - 기획파트 : 청년감독을 선정, 청년준비단 모집 후 기획전반 담당케 함
 - 실행파트 : 위탁대행사를 선정해 시설·시스템·안전관리 등의 하드웨어 담당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9 청년정책거버넌스 협치 강화

추진 방향

- 청년관련 부서 협업 확대
 - 협업팀 참여부서 확대 및 협업회의 정례화
(주요업무 부서 → 청년사업 관련 전체 부서)
- 시·구 청년정책 협업체계 구축
 - 시·구 협업팀 구성 후 청년정책 공유 및 협업사업 발굴

주요 내용

- 기본 거버넌스 운영
 - 대 상 : 광주청년센터(중간지원조직)·청년위원회(중간지원조직)·시(행정집행기구)
 - 운 영 : 정기(분기별) 또는 수시로 정보공유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 포괄적 거버넌스 조직 구성
 - 기본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책관련 전문가, 기업, 단체 등이 참여
 - 청년관련 문제해소 및 지원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의구조 형성

10 청년운영공간 교류활동 지원

추진 방향

- 목적에 따라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활동 활성화로 구분
 - 청년공간 활성화 :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공간 지원(5개~10개)
 - 청년활동 활성화 : 공간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지원(5개~10개)

주요 내용

-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민간 공간을 지정해서 교류 활동을 원하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 운영공간을 지원
 - 공간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등
- 소요예산 : 1억원(시비)

① 청년자립기반 확대

○ 청년부채 지원정책 추진

- 청년부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청년부채 대책 TF』 구성·운영
- 저소득 청년부채 지원정책 및 미취업 상환유예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 등 추진

○ 주거자립을 위한 청년주택 사업 본격 추진

- ‘거주+사무공간’인 청년창업주택단지(광산구 첨단과학단지 내) 조성
→ 2017. 12. ~ 2019. 12.(2년간) 100가구 신설
- 도시공사의 광주형 세어하우스(공간 공유형 연립주택 리모델링)와 연계한 청년창업자 정주 공간 1호(19개) 제공
→ 북구 저불로(용봉동) / 지상4층 건물 리모델링 / '17. 4. 16 준공예정

② 광주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산

○ ‘청년 주도형’ 청년정책 추진 모델 정립과 확산

- 청년정책 의제 설정과 집행과정을 통틀어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청년참여할당제 내실화 :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정책수립 용역 기타

③ 맞춤형 청년정책 지속 발굴 추진

○ 계층별 세분화된 청년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추진

- 세분화된 계층별 청년 생활 실태 조사 실시, 장애청년 우대정책 추진
-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 멘토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중점 컨설팅 지원

◆ ◇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에 대한 토론문**
◆ ◇ ◆

토론_ 조승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

토론_ 한동운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청년위원)

토론_ 신현식 (2030정책참여단 단원)

토론_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토론_ 김세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에 대한 토론문

조 승 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

2016년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3년제 이하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0.4~1.3개월 가량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재학기간 중 직장체험 등을 이유로 휴학기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2개월로 전년 동월대비 0.2개월 증가하였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8개월에 불과하였다. 졸업소요기간과 첫 취업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평균 근속기간이 1년 2.8개월밖에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고,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반면, 일자리가 무한대로 생겨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인공지능(AI) 로봇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앞으로 5년 내 500만개의 일자리가 순감하고 고용시장 양극화와 성별 격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많은 전문직, 생산직의 일자리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의 일자리는 정부정책과는 무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 자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AI, 자동화 기술, 로봇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일자리 감소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몇 가지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면 청

년 고용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경기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희망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청년정책은 대부분 고용정책에 치우쳐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따라가는 추세인 듯하다. 중앙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은 이미 140여개가 넘는다. 교육지원 정책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일자리관련 지원정책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리 참신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는 어렵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을 보더라도 이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자체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실행될 수 있도록 풍부하게 하는 것이 정책방향은 어떨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15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64%가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10명중 8명은 청년정책 정보를 알기 위해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청년정책이 무엇이 있고, 담당기관이 어디인지 기초적 정보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이 반드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정책 1개가 있다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실행시킬 수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 공공기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한번 선정된 지역을 쉽게 바꾸기도 힘들다.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지자체에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의 업무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 흩어져있던 우수기업 중,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중소기업, 임금체불이 없으며 산업재해율이 낮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2012년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부터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 바로잡아 지역내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강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청년시기의 문제가 아닌 청년으로 자라나는 과정의 문제라고

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청년문제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18년부터는 대입정원(60만명 수준)보다 고졸생이 적어지면서 군소 지방대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방대는 신입생 충원율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업률에 기초한 교육부의 대학개혁에 앞서, 오히려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진로탐색, 현장체험, 자유학기제,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특색에 맞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인재개발과 창업, 기업강화 전략을 세울 때이다.

◎ 참고문헌

- 통계청(2016.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에 대한 토론문

한 동 운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청년위원

루소는 국가의 형성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개인과 개인의 의사를 합쳐서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일반의지에 구속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입장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형성한 일반의지에 구속되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1.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청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조례 제정 및 청년 전담 팀을 꾸려 왔으며, 지역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정진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서울형 청년보장(Seoul Youth Guarantee)」’, ‘수원형 청년정책’,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 광주 청년정책기본계획’ 등이 있는데 그 영역 구분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청년정책이라는 도면이 목적에 맞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광주의 청년 관련 사업으로는 청년위원회와 청년센터가 있다. 이는 광주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9조, 제10조에 제시된 대로 각각 청년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 청년정책 발굴·연구·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핵심기구다. 그러나 청년위원회는 광주 청년들에게 대의 기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센터는 여전히 몇몇 광주청년들만을 위한 놀이터이다.

청년들은 권리자로서 누릴 준비가 되어있다. 청년위원으로서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주변 청년들에게 청년센터를 소개했을 때도, 청년의제 발굴을 위한 자리에 초대했을 때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런데 왜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가?

2. 전문성의 장벽을 허물자

전문성이라는 유리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경직성이 얼마나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일인지 아는가? 청년 기본 조례 발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 시의원을 찾아가 간담회를 열었을 때, 청년이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이라고 했다. 권리자로서 청년이 그 권리를 찾겠다는데 무슨 전문성이 그렇게도 필요한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놓고서도 그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길이 없었다. 아마 전문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정성이 없는 전문성, 객체가 만들어가는 전문성은 허황된 환상일 뿐이다.

독일의 노인대변인제가 호평을 받고 있다. 베를린은 인구 중 60세 이상인 노인이 1/4에 달한다고 한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베를린은 법안을 제정하고 노인대변인제를 시행했다. 구성 방식이나 역할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대의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인대변인들의 역할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한다. 의회, 행정 어디에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문제가 응답되는 정책,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청년 대의기구는 그 목적에 맞게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청년들의 의사가 모인 의견이라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청년들의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에 대한 토론문

신 현 식

대통령직속 2030정책참여단 청년단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하다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시국을 논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청년들, 2030세대는 자욱한 안개와 어둠에 가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을 지나며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란 단어가 참으로 애절하게 다가온다. 비단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만 놓고 보더라도 건국 이래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 지금,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도권’ 보다 ‘지방’이, 지방에서도 특히 ‘광주·전남’의 청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2030 청년층의 외부로의 유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나는 가장 큰 문제를 ‘지역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부재’, ‘수도권 대비 정보 제공 및 습득의 격차(어려움)’,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을 말하고 싶다.

위와 같은 부분은 예전부터 문제되어 온 부분인데, 지역경제 및 발전을 위한 원천이 되어야 할 ‘청년’의 인구 수 감소와 외부로의 유출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년’층의 핵심으로 20대, 그중에서도 대학(원)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에 바탕이 되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수가 광주·전남에 적지 않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2030청년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지역 경제는 갈수록 침체 되어 가고 발전이 더디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청년들의 머릿속에 언제부터인지 모를 ‘패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남게 되거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보는 주변의 인식과 시선 속에 우리 지역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다. 학력고사의 폐지 후, 대한민국 국민(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정규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경쟁하게 하여 ‘어느 대학(교)를 가느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등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지역(수도권 등)으로 가지 못한 학생들은 ‘실패’했다는 꼬리표를 달고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런 인식이 무의식중에 지방 청년(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각 지역에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각 정부기관 및 시도,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또는 시행 예정인 정책과 제도 등이 누구의 시선과 입장에서 논의되고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토론 내용에 언급되어진 지역의 다양한 청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광주·전남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지역 청년들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패배의식’을 해결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가깝게는 지역을,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0년 전에는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나날이 ‘혁신’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변화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단순히 ‘도전’과 ‘노력’하라는 말로 희망고문 하는 것이 아닌, 청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여 이 땅에서 당당히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에 대한 토론문

성 재 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1. 우리나라 청년의 문제는 성인이 이행과정 전반에서 발생. 평균적으로 볼 때 학업-취업-혼인-분가로 종료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취업도 안되고 혼인도 어렵고 분가도 쉽지 않음. 최근에는 학업도 등록금 등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잔뜩 짊어지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청년에 대한 정책은 이와 같은 성인이 이행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유입을 완화시키려면 청년의 일자리와 일자리 외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임. 두 발표문은 “다양한 정책을 융합하라”, “주거 등 자립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필요”, “학자금 이자 지원” 등에서 보이듯 공히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우리나라 청년 취업문제는 일자리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매우 큼. 일자리 간 상대적 격차가 크다 보니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 항상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 문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청년인구가 줄어도 청년 취업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3.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은 날이 갈수록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이동할 것.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영역이 발전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추격자들의 공세에 밀려 재편성 될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다가올 것임. 이 전환기에 각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고부가가치 청년 일자리는 이 영역에서 창출 될 것이기 때문임.

아울러 날이 갈수록 고졸 남성 적합형 일자리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관련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위협에 처할 것임. 안 그래도 고졸 청년의 미래를 의탁할만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와 같은 기술변화는 큰 위협요인이 될 것임. 새로운 제조업을 유치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비제조업 영역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컨설팅하는 정책역량 확보는 향후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전문가풀 확보? 관련 지원체계 확충? 등)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이나 이미지에 부합하는, 또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산업의 일자리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야 함. 광주의 경우라면 비엔날레(문화예술), 정의와 참여민주주의(사회적 경제?) 등의 이미지가 존재. 향후에는 인간의 창조성, 상호작용성이 중요한 직업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전망을 볼 때 이와 같은 관련된 일자리가 자리잡고 선순환될 수 있게 광주의 이미지를 만들고, 적극 홍보하며, 관련 일자리 생태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4. 이 외에도 4년제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등 학력별로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지원정책 설계될 필요. 4년제 대졸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뚜렷하고, 고졸청년은 중소기업의 어느 정도 임금과 근로환경이 되는 일자리도 선호하는 차별성 존재. 이를테면 4년제 대졸자는 좀 더 자율적인 구직활동+생활비부담경감 지원, 고졸청년은 좀 더 훈련과 결합된 구직활동+생활비부담경감 지원 같은 차별화된 정책 프로그램 제공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성별로 차별화된 정책 영역 개척도 필요. 지역 기업들의 성차별, 일가정양립 문화기반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5. 나가며: 청년 연령대가 살만한 도시가 아니면 고령화 시대에 도시의 축소는 불가피. 일자리와 살만한 환경(교육, 질 높은 보육, 주거 지원 등등)을 확충하며 홍보해 나가야 함. 두 발표문은 이와 같은 큰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정책으로 담아내는 모습이 보여 우리나라 지방발전, 광주의 발전이 기대되었다는 말로 토론을 맺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에 대한 토론문

김 세 나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부연구위원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 종합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의 주요한 청년정책 및 관련 거버넌스를 리뷰해 본 연구는 의미있는 시도이다. 본 토론문에서는 이 작업을 기반으로 향후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의 지향점 혹은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가 청년정책에서 어떤 구체적인 주요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가와 함께, 그것을 통해 각 지자체가 구현하고자 하는 최종성과 혹은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종합계획에 국가사업으로 승격시킬 정책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 수도권-지방, 또는 좀더 세분화하여 수도권(서울<-->경기도)-충청권-남부권 등 지역별 상황에 기반해 중시되는 정책방향을 정리하여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 간 상생협력에 기초한 중앙-지자체 협력적인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기본계획을 발표한 곳들도 있고, 산하 연구원 차원의 연구보고서로만 발표된 곳들도 있어 제안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지자체별 실행계획 간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 지자체별 기본계획(또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폭넓은 리뷰와 고찰을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지자체 입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정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청년문제와 같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자체 계

획들은 속속 발표되는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부재한 현 상황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향후 발전 방향 및 여러 유관부처와의 협력 방안, 종합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개별 부처단위로만 접근되는 현 국가 청년정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수립되는 청년정책 및 본 연구가 이러한 노력의 시작점이라 판단된다.

M/E/M/O

M/E/M/O

M/E/M/O

M/E/M/O

M/E/M/O

제7차 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